성장 36번 외친 李 대통령… 820조로 민생·미래 동시 공략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성장의 성과,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
핵심 축 '3대 민생 프로젝트'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었다. 연설문에서 '성장'은 36번 등장했다. '투자'와 '지원'도 각각 24번 언급됐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통해 경제 성장의 지속과 그 성과의 확산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성장 확산 예산'이라는 표현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처음 쓰였다.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과 정상화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서두에서 취임 후 지난 1년 5개월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반등 전망과 상반기 성장률 3.8%,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까지 고르게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언급하며 이런 성과에도 불평등과 양극화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에 띄는 것은 민생정책을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3대 민생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이를 '모두의 성장'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내세웠다.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매트'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역시 이를 기반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투자와 민생 지원을 별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성과가 다시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상한 셈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방향이 반영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동시에 청년 예산을 43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국토대전환과 지방 주도성장에 3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역시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를 연결하는 핵심 장치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청년, 미 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성장 확산 예산'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면서 성장의 온기가 개인의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청년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을 36번, '지원'과 '투자'를 각각 24번 언급했다. '국민'은 23번, '미래'는 16번이었다.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병행하겠다는 의도가 여기서도 드러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색과 회색이 사선으로 교차하는 넥타이를 매고 연설했다. 청와대는 "신뢰와 책임을 뜻하는 두 색상을 통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162조 기금 적절성 놓고 여야 '신경전'

예정처 주최 2027 예산안 토론회
민주 "기금의 균형 있는 운용 중요"
국힘 "재정 통제 우회하는 수단"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을 초청해 2027 예산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태홍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예산 정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8.3%로, 절대금액은 전년(1413조8000억원) 대비 늘어나지만 국가채무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분야별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9.7%가 증가한 41조2000억원, 연구·개발(R&D) 분야가 11.2% 증가해 39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20.4% 증가해 1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담대한 투자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경제에서 담대한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사업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사업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예산안 심사 때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선 정부가 총 162조원 규모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양당 예결특위 간사의 입장이 갈렸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인재 계정을 담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45조4000억원의 사업 지출 중 청년 계정에 13조3000원을 편성해 일자리·창업, 주거 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동력 계정엔 14조2000억원을 편성해 AI·전략기술, 지분 투자, 전력·용수 인프라에, 지방 계정엔 10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방성장, 생활편의시설, 행정통합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계정엔 7조6000억원을 편성해 첨단인재 양성, 고등·영유아 교육을 지원한다.

정태호 예결특위 여당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혁신, 반도체 경기 둔화를 대비한 안전판 확보, 국가 부채 비율 관리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의 균형점을 찾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사업 계정들의 사업들이 추후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예산안 심사 때)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여유자금 104조원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상범 예결특위 야당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깎아내렸다. 유 간사는 "국민의힘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첫째, 기금의 연도별 수입 지출 내역과 여유자금 잔액을 원점에서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 기금 여유 자금 104조4000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부채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조정하겠다"며 "국회 의결 없이 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현재 30%)를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통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교섭 문 열렸지만… 노란봉투법 현장 혼선

›› 1면 '시행 7개월'서 계속

다만 이번 합의는 4개 자회사 노조와 맺은 것으로, 따로 교섭하는 사내 협력업체 노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

첫 만남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던 사업장도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는 지난 10월8일 첫 상견례를 했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원청으로서 교섭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회사는 교섭 요구 노조 공고 시 웰리브지회도 포함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월1일 이를 기각해 8일 첫 교섭 일정이 잡혔다.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도 교섭 대상과 논의 범위가 쟁점으로 남았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난 10월16일 창원컨벤션센터(세코·CECO) 용역노동자와 관련한 공공연대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 달 23일까지 다른 노조의 교섭 참여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직후인 지난 3월 교섭 요구가 제기된 이후 공고까지 7개월여가 걸린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12일 경남도와 창원시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두 지자체가 세코 용역노동자의 휴게시설·안전시설·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교섭할 책임이 있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다.

경남도는 교섭 대상을 세코 용역노동자가 소속된 노조로, 논의할 내용은 노동위가 인정한 범위로 한정했다. 창원시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업장별 교섭 속도 차이의 원인을 판단하려면 사례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아직 과도기에 있다"며 "지금은 제도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내년 상반기까지 교섭 경과를 지켜보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과기정통부, 카카오 출신 AI 전문가 영입

국민 체감형 공공 AI 직접 개발



정부가 카카오 출신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영입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개발에 직접 나선다. 기존 외부 업체에 개발을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개발자와 공공 부문 전문가가 협력하는 자체 개발 체계를 구축해 공공 AI 서비스의 개발 속도와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김세웅 전 카카오 AI 시너지 성과리더(부사장·사진)를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은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조직이다. 민간의 기술 개발 역량과 서비스 사업화 경험을 공공 부문에 접목해 국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외주 중심의 공공 정보화 사업과 달리 정부 조직 내부에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간에서 활동하던 개발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공공 부문의 AI 전문가와 함께 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단은 1단 1관 4팀 체제로 총 61명으로 구성됐다.

/최빛나 기자 vitna@